핵심정책토의

외교부 2017년도 하반기 핵심정책 추진계획

목 차

1. 북핵 문제의 평화적 해결과 평화체제 구축 ····· 1

2. 국민과 함께하는 외교:
국민 및 세계와 소통하며 국민을 보호하는 외교 ····· 4

1 북핵 문제의 평화적 해결과 평화체제 구축

□ 개 요

o 최근 한반도 긴장이 고조되고 북한 핵무장 완성이 최종단계에 진입하는 엄중한 상황下, 북핵 문제의 평화적·근원적 해결 및 한반도 항구적 평화 정착 위한 전기(轉機) 마련 필요

o 당면 과제로서 △북한 핵·미사일 도발 억제 및 비핵화 대화 복귀 견인과 △한반도 평화체제 구축 로드맵 마련 및 이에 대한 주요국 공감대·지지 확보 추진

□ 쟁 점

o 북한은 비핵화 의지를 보이지 않는 가운데 핵무장 완성에 집착, 가까운 시일내 태도 변화 난망시

- 미·중, 미·러 관계상 갈등 상황을 활용하여 제재·압박 구도 무력화 시도

o 북한의 ICBM 능력 현실화에 따라 북·미간 대립이 격화되면서, 북한의 오판에 따른 우발적 충돌 및 미국의 군사적 조치 가능성 우려 제기

o 北 도발에 상응하는 제재·압박 강화 필요성과 우리 주도의 한반도 평화 구축·남북 관계 개선 구상 간 조화로운 추진

- 北 도발 중단 등 비핵화 대화 재개 여건 조성을 위한 능동적 노력 필요

- 「베를린 구상」 동력 지속을 위한 북한의 조속한 호응 견인 필요

o 평화체제 로드맵 가동을 위한 우호적 환경 마련 필요

- 이를 위해 한반도 평화체제 관련 주요국간 공감대 확보 및 북한의 평화체제 구축 로드맵 참여 유도가 관건

□ 향후 계획

【 북핵 문제의 평화적 해결 】

o 굳건한 한·미동맹 및 국제사회 공조를 바탕으로 북한 도발 억제 및 한반도 긴장 완화·해소를 위한 외교적 노력 지속 전개

- 북한의 추가 도발 억제를 위한 강력한 한·미 연합방위태세 유지
  * 한·미 미사일 지침 개정 추진 및 확장억제전략협의체(EDSCG) 정례화 등 대북 억지력 제고를 위한 한·미 협의 강화
- 북·미간 '强對强' 대립 구도의 완화를 위한 우리의 능동적 역할 모색
  * 한·미 정상·외교장관·안보실장 및 국방당국간 긴밀한 전략적 소통 지속 강화
- 북한 도발 억제 위한 중국의 대북 영향력 행사 지속 견인
- 북핵 관련 안보리결의 이행 확보를 위한 한·미/한·미·일 공조 강화
  * 유엔총회, APEC·EAS 등 주요 외교행사 계기 정상·장관급 회동 및 한·미·일 차관협의/6자회담 수석대표협의 등

【 대화와 협상 방안 능동적 모색 】

o 북한의 도발 지속 상황 속에서 비핵화 대화 재개 여건 마련을 위한 노력 배가

- 고위급 전략협의체 가동 등 한·미 긴밀 공조下 비핵화 대화 재개 구체 조건 및 단계적·포괄적 협상 방안 협의
- 북한의 비핵화 결단을 유도하기 위한 한·미 전략적 메시지 ('평화적·외교적 해결', '4NOs' 등) 지속 발신

* 4NOs: 북한 정권 교체·정권 붕괴·한반도 통일 가속화·38선 以北 미군 진입 구실 모색 不추진

【 적극적 중·러 견인 】

o G20 계기 성공적 對중·러 정상외교를 바탕으로 중·러의 건설적 역할 지속 견인

- 중·러와 정상 및 장관급 차원의 전략적 소통 강화
  * 대통령님 러시아 동방경제포럼 참석(9.6-7) 계기 한·러 정상회담 등

【 평화체제 로드맵 】

o 우리 주도하에 실효적 평화체제 로드맵 마련 및 주요국 공감대 확보

- 유관부처간 긴밀한 협업을 통해, 북한 비핵화 진전에 따른 평화체제 관련 상세 추진 계획 수립('17년 하반기)
- 주요국들과 평화체제 추진 관련 상세방안에 대해 긴밀히 소통·협의
  * 미국은 한반도의 평화 통일 환경을 조성하는데 있어 대한민국의 주도적 역할을 지지(6.30 한·미 정상회담 공동성명)

2 국민과 함께하는 외교 : 국민 및 세계와 소통하며 국민을 보호하는 외교

□ 개 요

o **정부 간 외교를 넘어서 국민과 함께 하는 국민중심 외교를 지향**

- **국민과의 소통**을 통해 외교 사안에 대한 이해 제고, 공감대 형성 및 국민의 참여 확대
  ⇒ 국민의 지지 확보
  ⇒ 국민 외교 역량을 결집하여 국익 증진
- **전략적 공공외교 확대 추진**을 통한 국가 브랜드 제고
- 우리 외교 정책에 대한 주요국 여론주도층의 지지 기반 확보

o **2천만 해외여행객 시대* 재외국민보호 및 720만 재외동포와의 유대 강화**

* '16년 출국자 2,200만명('01년 대비 4배), 사건사고 14,500건('01년 대비 26배)

□ 쟁 점

【 국민 및 세계와 소통하는 외교 】

o **국민 의견 수렴 과정에서 일부 논쟁적 사안에 대한 국민 합의 도출 어려움**

o **외교관련 여론이 장기적인 외교 전략 목표와 부합하지 않을 가능성**

o **외교 협상 관련 민감한 정보 공개 요구 가능성**

- 사안별로 적절한 균형 모색 필요

o **부처별·지자체별로 각각 수행중인 공공외교성 사업의 시너지 효과를 위해 범정부 차원의 보다 체계적·통합적인 공공외교 체제 필요**

【 국민을 보호하는 외교 】

o **주말, 심야 등 근무시간 이외 취약시간대 해외 사건사고 초동대응 시스템 부재**

- SNS시대 초동대응이 정부 신뢰도에 결정적 영향

o **동포사회 구성원 다변화**(舊정주자/新정주자, 기성세대/차세대 등)**에 따른 다양한 지원 수요 증가**

□ 향후 계획

【 국민 및 세계와 소통하는 외교 】

o **외교정책의 수립과 집행 과정에서 '국민외교' 시스템의 구현**

- 국민 참여 온라인 플랫폼 확대 및 **국민외교센터를 통한 오프라인 의견 수렴**
- 주기적 여론 조사 및 빅 데이타 분석을 통한 민심 분석
- 각계각층 정책고객에 대한 맞춤형 소통 사업 추진
- 수렴된 여론 기반 외교 사안별 공론 형성 및 정책에의 반영 추진
- 외교정책 집행과정에도 민간 외교자산을 활용하는 등 국민 외교 역량 결집 추진

o **공공외교를 확대하여 국가 브랜드 제고, 우리나라에 대한 올바른 이해 확산 및 우리 정책에 대한 지지와 공감 확보**

- **범정부 차원의 공공외교 통합조정체계 확립**
- 다양한 매력자산(문화, 지식, 정책)을 활용한 현지 맞춤형 공공외교 강화
- 주요국 대상 정책공공외교 활동 추진
- 국립외교원과 해외 주요 정책연구기관간 파트너십 강화
- 특히, 민간차원의 공공외교 역량을 활용·강화하고 해외 진출 기회 제공 및 국제적 인재 양성에도 기여하는 **'국민 참여형 공공외교' 활성화**

【 국민을 보호하는 외교 】

o **해외 재난, 테러, 각종 사고로부터 우리 국민들을 보호하기 위한 영사 인프라 확충**

- 365일 24시간 가동 「**해외안전지킴센터**」 **내년 초 발족**
- 사건사고 전담 영사인력 확충(65명→104명)
- 사건사고 예방 증진을 위한 해외안전홍보 강화(KBS, MBC 등 방송 매체, 카카오톡 등 SNS 활용)

o **권역별, 세대별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재외동포지원 정책 수립**

- 차세대동포 한글교육 지원 및 모국초청연수 확대, 4천여개 한상기업 네트워크 활성화 등